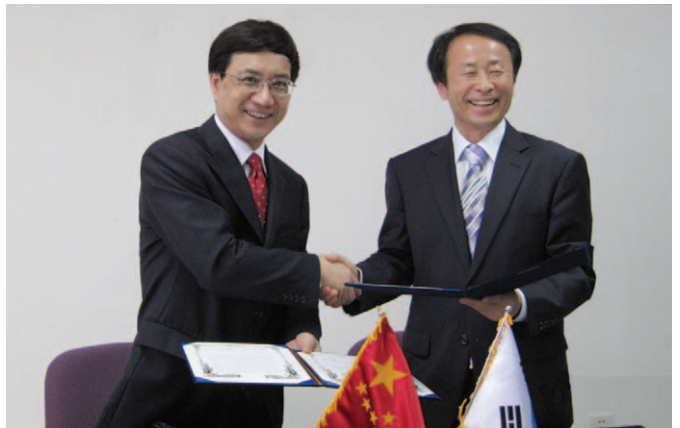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8월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중국 농업정책연구중심과 연구협력협정 체결



오세익 원장은 7월 30일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과 연구협력협정(좌)을, 8월 17일에는 중국의 농업정책연구중심과 연구협력협정(우)을 체결했다.

지난 7월 30일 오세익 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과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구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공유, 연구진과 교수진의 교류,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연구자 및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해 관련 있는 대학, 연구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연구협력협정 체결 후 오세익 원장은 워싱턴주립대학의 댄 버나도 농대학장과 양 기관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미국 총 사과생산의 45%를 차지하는 워싱턴주 사과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세익 원장은 8월 17일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과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한 뒤 황지쿤 주임과 향후 상호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중국 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은 중국 농업·농촌의 발전 전략과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연구기관이며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최초

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농업정책연구중심은 농업과학기술정책과 자원환경정책, 도농협력발전과 빈곤퇴치, 농산물 정책에 대한 분석과 지원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우리 연구원과 유익한 연구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구원은 6월 18일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에 이어 농업정책연구중심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 양국 관심분야의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세계농업경제연구기관장 워크숍 '녹색성장' 발표



글로벌클럽 워크숍에서 오세익 원장이 '한국농업의 녹색성장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오세익 원장은 8월 16일 중국 북경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농업경제 연구기관장 모임인 글로벌클럽(Global Club) 워크숍에서 '한국농업의 녹색성장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오 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과 개념, 비전, 농업의 녹색성장 동력사업화,

농촌의 녹색공간화, 저탄소 국가식품 시스템 구축,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 네 가지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을 밝혔다. 또한 최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호주, 이태리,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농업경제관련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하여 한국 농업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나눴다.



선진국형 식량안보체제

김 명 환 선임연구위원

20세기 국제적인 식량위기상황은 1, 2차 세계대전, 1975년, 최근 2007~08년 등 대략 30년 주기로 발생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개도국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으나, 선진국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이었고, 1970년대 후반에 주곡 자급을 이룬 후에도 1980년, 1993년, 2003년 등 10여년 주기의 흉작, 1997년 외환위기 시 외환 부족에 따른 곡물 수입중단위기 등이 있었다. 즉 식량위기의 요인들은 전쟁, 기상이변, 가난한 가계, 국민경제의 펀더멘털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식량안보는 가용성, 접근성 확보

식량안보의 첫 번째 요소는 양적 가용성(availability) 확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은 가용성 증진에 있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1980년대까지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주곡 위주의 증산과 공공비축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민경제적 접근성(national accessibility)이다. 1990년대에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해외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연달아 닥치면서 국민경제의 펀더멘털, 안정된 수입선 확보, 국제교역질서 왜곡 방지 등 국가 차원의 경제적 접근성이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것이 이들 가용성과 거시적 접근성이었다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선진국형 식량안보의 요소로 우선 개별 가구의 접근성(household accessibility)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계층의 식품과 영양 측면을 포함한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의 코호트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50년 인구는 현재 4,900만명보다 13% 줄어든 4,200만명이 되고, 1970년대까지 삼각형이었던 인구피라미드 구조는 현재 항아리형이며, 2050년에는 역삼각형이 된다. 국가 어젠다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는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형은 식품안전, 영양 균형 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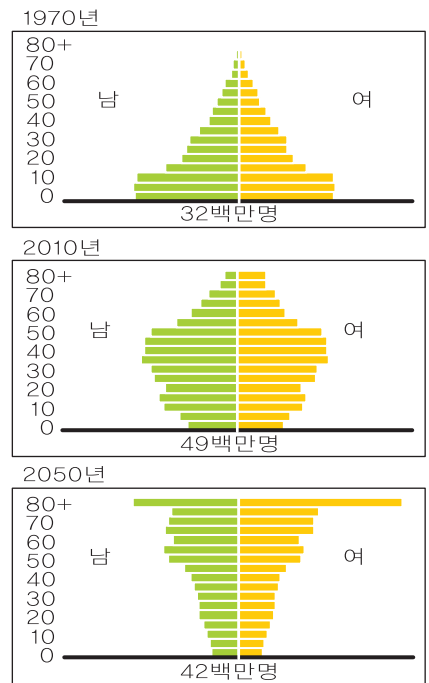
그 다음 요소로서, 교역증대에 따라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축질병, 유해식품 등 식품 안전성(safety) 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은 품목, 가공 정도, 유통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처 등으로 분산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와 책임회피가 상존하며 반복된다. 행정편의적으로 관련 법도 각각이고, 법끼리 기준이 다른 모순도 있다.

광우병 등 대형 사고를 겪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을 기하기 위해 식품안전행정을 통합하였다. 우리의 법률 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 하에 하위법들이 빠진 곳과 모순 없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행정조직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요소로서, 국민 건강(health)과 균형된 영양(balanced nutri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의 서구식 식단이 늘어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 텔레비전에서는 올바른 식생활, 권장 식단, 필수적 식품 등에 대한 공익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성별, 연령대별로 과잉, 과소되는 영양소들을 조사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식량안보 개념의

인구 피라미드(한국)



자료: 통계청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식량안보의 대상이 곡물 중심에서 전체 식품과 영양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전체적인 총량적 접근성 향상에서 국민과 가계의 미시적인 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식품시스템과 지표

또한, 생산과 비축 위주의 공급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영양 균형, 안전한 식품 등 소비자 중심의 수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식품안보 지표는 곡물 자급률, 곡물비축률, 1인당 농지면적 등 공급 측면의 지표들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수입선다양화지수, 소비자식품물가, 계층별 앵겔계수, 연령대별 영양균형지표, 생산 및 유통 중의 유해요소발생지표 등 소비 지표들을 개발하고, 자급률과 비축률도 식품군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쌀 소비 촉진과 출산 장려

김 성 훈 부연구위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실감하는 일이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60~70년대 쌀이 부족하고 인구가 넘쳐나서 국가가 ‘혼·분식 장려’와 ‘신아제 한’을 했던 것이 최근에는 ‘쌀 소비 촉진’과 ‘출산 장려’로 180도 변화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결도는 출산 장려 정책

과거에 학교에서 매일 도시락을 검사받고, 맬서스(T. R. Malthus)의 인구론에 대한 시험 문제를 풀던 필자에게 이 두 가지 운동의 지향점이 정반대로 변화한 것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흥미롭다.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까지 가공용 쌀 사용 비중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바와 같이 주로 쌀 가공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불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필자가 굳이 농업과 관련이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쌀 소비 촉진 정책보다 먼저 실시되고 있음에도 정책 효과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책이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 상태로 돌아선 다음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꽤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을 정책 담당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 후 육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자녀를 키우는 동안 들어가는 각종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현실 앞에서 - 무슨 경품 지원하는 것처럼 - 아이 몇 명 당 얼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생색내기용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십분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은 중장기 핵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양한 단기 처방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쌀 소비 감소에 대한 여건

우리나라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에 앞서 현재와 같은 쌀 소비 저조를 야기하는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과거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여러 연구 기관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인구의 정체 내지는 감소 등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에서야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 물론, 쌀 소비 촉진에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 쌀 가공 산업 육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정책들이 얼마나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뒤집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쌀 가공식품이 밀가루 가공식품보다 웰빙(Well-being) 코드에 더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쌀 가공식품 시장은 아직까지도 소규모 틈새시장에 불과하고,


향후 주류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은 쌀가루의 매우 낮은 가격 경쟁력과 가공 공정상의 특성 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쌀 소비 저하에 대한 정책적 대안

보다 명확한 쌀 소비 촉진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왜 쌀 소비 감소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쌀 소비 감소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자급률 유지 어려움 등일 것이다. 즉 쌀을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면 쌀의 농가 수취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쌀 공급 측면에서 완화할 방법이 없는 지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데, 이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데에만 전력투구하지 말고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량은 줄어들더라도 단위당 농가 수취 가격을 올리고 생산 비용은 절감하도록 하여 쌀 생산 농가의 실질 소득 하락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쌀 잉여분을 국외에서 소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현실이다.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분식을 먹이는 식의 30~40년 전의 정책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우리는 강산이 서너 번이나 변한 21세기에 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쌀 소비 촉진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처럼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남북관계 변화를 보며

김영훈 연구위원

최근 특사조문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 남측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우호적인 말들을 쏟아 놓았다고 한다(연합뉴스). “직접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사회·문화교류도 하고 의원교류도 하자.”, “개성공단은 아직 1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적인 일류 공업단지 만들어야 한다.” 등이다.

특사조문단의 선물

이는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리 새롭고 획기적이라 할 수는 없다. 지난 두 정부 10년 동안 남북한 교류의 식탁에 오르내렸던 화려한 메뉴들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 간 경색국면이 엄혹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여전히 변화무쌍한 남북관계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정부 교체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기초해 농수산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후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은 경제교류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2008년 말 12월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원 제한,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 폐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12.1조치). 더 나아가 올해 3월에는 현대아산 관계 직원을 억류했다. 6월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마지 공단의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이는 듯 했다.

북한은 군사·외교적 측면에서도 강공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실험을 단행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이유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연이어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만 해도 경제와 정치 양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듯 보였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반전이 찾아왔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다. 비록 당국자 간의 협의는 아니었으나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안전보장, 12.1조치의 해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5개 항의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북한 조문단의 우호적 발언들, 개성에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이 모두 이즈음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한 해석은 다소 성급한 것처럼 느껴진다. 설령 남북한이 위에 언급된 교류협력을 모두 성사시킨다 해도 그것은 2008년 7월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간 우리 정부의 이렇다 할 유화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북한이 태도를 달리 했다는 점만은 과거와 사뭇 다르며, 이러한 변화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

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농업교류 현장의 실무적 변화 필요

남북한 관계의 극적 변화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된 현상이다. 그러한 변화가 모두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전략과 기술적 고려가 개입하곤 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양측의 전략적 고려, 이에 토대한 합리적 정책의 개발, 그리고 합의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우리정부의 원칙적 자세가 깊은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합리적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커다란 차원의 남북합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 신호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교류협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점치게 하고 있다. 여건 호전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며, 이 분야 종사자들은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과거와 달리 유념해야 할 것은 농업교류협력 현장에서 양측의 변화의지가 교류협력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목표 설정, 견고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 구축이 우리의 할 일이라면, 자립의지가 반영된 수용태세와 개방적 자세는 북한이 취해야 할 몫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교류협력과정의 개방적 조치에 따르는 위험·편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경험하면 교류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DDA 농업협상 동향과 하반기 전망

송 주 호 연구위원

2008년 여름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뻔한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은 2008년 12월에 모델리티 4차 수정안까지 나오는 등 쟁점이 크게 압축되었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와서는 협상이 별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가꿈 열린 주요국 정상 회담에서는 조속한 DDA 타결을 지지하는 정치적 선언이 있었다.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를 비롯, 6월 8일과 9일의 케언즈 그룹 모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상장관 회담, 7월 초 G8+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배척해야 하며 DDA협상의 조속한 종결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재개하였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도 DDA 협상에 관한 종전의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국 협상 책임자의 정비

2009년 상반기에는 주요국들의 DDA 협상 책임자가 교체되어 업무 파악 및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9년 1월 말에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통상장관(USTR)으로 3월에야 론 커크를 임명했다. 인도는 5월 총선이 끝나고 아난드 샤르마를 새로운 통상장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 그룹의장으로 4월 22일 제네바 주재 뉴질랜드 대사인 데이비드 월커가 새로 선임되었다. 이로서 주제네바 뉴질랜드대사

들은 팀 그로서(2003~2005), 크리포드 팔코너(2005~2009)에 이어 3번째로 농업협상그룹의장을 맡게 되었다. 임기 4년인 WTO 사무총장으로는 2009년 8월 말까지가 임기인 현 총장인 파스칼 라미의 재선이 4월 30일 결정되었다.

WTO 총장의 DDA 협상 독려

2008년 12월에 모델리티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를 시도하였다가 타결 가능성이 낮아 각료회의 개최를 연기했던 라미 WTO총장은 2009년에 들어서도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라미 총장은 10월까지 각 협상 그룹의장에게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고,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여 이행계획서 협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DDA 협상은 농업과 비농산물협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협상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 규범 협상 등 다른 협상도 병행하는 수평절차(Horizontal Process)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라미 총장의 적극적인 조기 종결노력에 대해 많은 WTO 회원국들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협상 전망

7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는 DDA농업협상이 재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별 토의 없이 9월 이후 모델리티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었다. 2009년도 하반기 협상은 2008년 12월의 4차 모델리티 수정안을 토대로 쟁점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라미 WTO총장과 데이비드 워커 농업협상그룹의장, 그리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델리티 협상과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하지는 주장의 논거는 최근까지의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 각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내용이 너무 많다. DDA 협상에서 각국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 만큼 시장개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R/O(Request and Offer) 방식의 양자협상을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면 모델리티 협상의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행계획서 병행 작성은 DDA 협상 시작 당시의 협상 기본방침(mandate)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럴 경우 융통성이 제약되고 주요국들의 개별적인 압력이 심해져서 개도국들에게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9년 11월 각료회의 개최 예정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차 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WTO각료회의는 보통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5년에 홍콩에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정례각료회의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는 각료회의가 DDA협상위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DDA협상 진전여부와 상관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자통상체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과 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료회의 개최 전에 DDA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DDA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R**

일본, 식물공장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김태곤 연구위원

농업은 농지를 주로 이용하는 '토지이용형' 농업과 자본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시설형' 농업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연 온도나 태양광을 이용하고 비료와 관개로 작물을 재배한다.

후자는 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빛, 온도, 양분, 이산화탄소, 물 등을 실내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연중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적 생산시스템이다. 이것이 '식물공장'이다.

최근 일본에서 식물공장이 기업의 농업진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외기업의 농업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식물공장도 50여 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전국에 50여 개의 식물공장이 가동

식물공장은 두 가지 생산방식이 있다. 하나는 폐쇄공간에서 태양광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적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완전 제어형'이고, 다른 하나는 온실과 같이 반 폐쇄공간에서 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우천이나 흐린 날에는 빛을 보광하는 '태양광 이용형'이다.

식물공장은 고도로 제어된 조건에서 재배환경이나 생육과정에 대한 통제와 생육예측이 가능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토지제약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생산, 고품질·무농약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채소 중에서 엽채류와 과채류, 화훼류가 주된 생산품목이다.

농업은 기상조건에 강하게 지배받는 관계로 농가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식물공장은 첨단기술이나 정보기술(IT) 등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농업'으로의 변신이다. 이러한 변화는 후계자 부족이나 고령화에 의해 농업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장래를 상정하거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장과 같은 작업환경을 갖추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한다면 토지가격이나 환경에 대한 제약이 높은 도시지역, 유휴 공장, 빈 점포, 또는 농업유지가 곤란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기존 농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은 최적의 제어를 통하여 식물이 받는 온도·빛·수분 등의 스트레스를 회피하여 생육속도, 생산량, 안전성, 맛 등의 면에서 유리성을 가진다. 연작장해 회피를 비롯하여, 고속 생산, 생산성 향상, 쾌적한 작업환경,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이 최대의 강점이다.

이러한 점을 잘 살리고, 식물공장 전용 품종개발, 전용 로봇개발, 제조업부문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활용 등의 조건을 갖추면 현재의 엽채류와 과채류 생산에서 최종적으로는 곡물 생산으

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엽채류의 단수는 노지에 비해 4,000배에서 8,000배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곡물까지 확대된다면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벌레나 세균이 없기 때문에 농약 살포가 필요 없다. 무균상태에서 포장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씻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다.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식물공장에 관한 조사결과(2009. 8. 21)에 의하면, 이미 소비자의 약 7할이 식물공장 채소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며, 일반 채소에 비해 '맛'이나 '영양가'는 떨어지는 반면에 '외관'이나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6할은 가격이 싸면 식물공장 채소를 구입한다는 의향이다. 통상 생산비가 비싼 식물공장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맛이 나 영양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고령화나 후계자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를 초래하는 일본 농업의 구조문제를 해결하고, 식물공장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우선 생산비가 높고 재배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아서 비닐하우스보다 채소 생산비가 2배 이상이나 높다. 또 양액 재배가 가능한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채산성이 맞는 것은 엽채류나 허브 등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제약이다.

식물공장 전용의 다양한 품종 개발도 선행되어야 한다. 전용 품종을 가지고 일관적인 생산과정 개발, 소매점이나 직거래를 통한 판매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식물공장 설립에 지원하고 있다. 향후 2009년 예산에서 향후 3년간 3배 이상의 공장 설립을 목표로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모델시설 정비, 세계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의 고용 확대와 활성화에 기대한다. 농작업 환경 개선과 고용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지역에서의 고용확대와 활성화에 기대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여지도 남아있다. 시설 수출을 비롯하여, 공장 설립에서 운영까지의 일관기술 판매, 농업·수경재배·생산관리 등 기술 지원 등에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식물공장은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저탄소, 식품 안전성, 안정적인 농업생산 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식물공장의 설비와 기술의 해외수출에 대해 일본 정부·기업의 기대는 매우 높다. 

8월 주요 농업 · 농정 동향

2008년 농림업 생산액 동향

2008년 농림업 생산액은 2007년 35조 8,372억원보다 3조 8,254억원(10.7%)이 증가한 39조 6,6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업 생산액은 38조 4,698억원으로 2007년 34조 6,850억원보다 3조 7,848억원(10.9%)이 증가하였으며, 임업 또한 1조 1,928억원으로 2007년 1조 1,522억원보다 406억원(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 부문 중 식량작물 생산액은 10조 6,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0%, 과실은 2조 9,984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나, 채소는 7조 2,135억원으로 3.6% 감소하였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량작물, 채소, 과실 부문이 각각 26.7%, 18.2%,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 생산액은 13조 5,929억원으로 2008년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34.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2조 3,156억원(20.5%) 증가하였다.

2008년 농림업 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재배업은 2007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아 미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곡, 과실, 특용작물 등의 농가 판매가격도 상승하여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축산 부문은 생산량 증가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생산액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부문 생산액은 용재, 수실, 약용, 산나물 등의 생산액 증가로 전년에 비해 소폭(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림업 생산액은 각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며, 농림업의 생산량을 지수화하여 연도별 생산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23억 달러(7월 21일 현재)로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식품 수입국의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등 불리한 수출여건으로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신선농식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0.1%)인 309백만 달러 수출하였으며 가공농식품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215백만 달러, 수산식품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771백만 달러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딸기(68.6%), 장미(51.3%), 팽이버섯(240.4%) 등이 대표적이며,

배(-28.6%), 양란(-56.5%) 등은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6.2%), EU(10.0%), 홍콩(8.0%), 미국(4.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34.7%), 중국(-16.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되어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출이 급감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재개, 열처리 돈육의 대일 수출 작업장 승인 등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율하락, 유가상승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등 기존의 대책 이외에 신속한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가능 품목 확대, 신규시장 개척품목 중점 지원, 신규 해외 마케팅 추진,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 인도 CEPA 정식 서명

한 · 인도 양국 정부는 지난 8월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하지만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하여 낮은 수준에서 개방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하였다. 대신, 대두박이나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하였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였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국가간 협정이며, 이번 한 · 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이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동북아농업의 기회와 도전’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개최



한중일 공동으로 북경컨벤션센터에서 ‘동북아농업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국 북경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연구원과 한국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 일본농업경제학회가 공동으로 ‘동북아농업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1분과는 ‘동아시아 농업개발 및 정책 - 과거 성과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오세익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는 ‘중국농업개발 및 정책’이란 제목으로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 황지쿤 주임이 발표했다. 이어 ‘한국의 농업개발과 정책’이란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가, ‘일본의 농업개발과 정책’이란 제목으로 도쿄대학교 혼마 마사요시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2분과는 ‘동아시아 내 농업교역 조건 -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큐슈대학교 이토 쇼이치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 양전 연구위원이 ‘동북아시아 내 농업교역-중국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일본 니카타대학교 키미나리 릴리 교수가 ‘동북아시아 내 농업교역-일본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경상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동북아시아 내 농업교역-한국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시아 FTA와 농업분야 - 효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FTA 협상에 대비하여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국가·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동아시아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별 영향을 추정, 발표했다.

이어 한국농업경제학회 이병오 회장이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중국농업부 정보중심과 정보교류회

농업관측정보센터는 8월 20일 중회의실에서 연구원과 연구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농업부 정보중심과 한·중 전문가 연구정보 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에는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리 웨이커(李偉克) 부주임을 비롯 4명의 연구진이 참석했고, 연구원은 김정호 농업관측정보센터장과 농업정보화팀 연구진이 참석해 관측사업을 비롯한 정보 교류와 양기관의 연구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 동정

- △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이상곤
- △ (신규채용) 전문연구원 김미복(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진 동정

- △ 허덕 연구위원은 8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우 육질 등급별 농가 경영전략 수립’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김창길 연구위원은 8월 10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워크숍에서 ‘기후 변화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권오복 연구위원은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가 8월 2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농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 송미령 연구위원은 8월 14일 제주 대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글로벌이카데미에서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 △ 정은미 부연구위원은 8월 12일 고려지 농업연구센터에서 열린 딸기 연구사업단 워크숍에서 ‘딸기 국산신품종 보급효과’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8월 월례조회, ‘4대강 살리기와 미래국토 발전’



8월 월례조회에서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특강을 했다.

우리 연구원은 8월 3일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를 가졌다. 오세익 원장은 조희사를 통해 “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하여 연구원 분위기가 더욱 밝아지고 있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취임하여 10개월 동안 추진해 온 결과를 돌아봤다. 오 원장은 “앞으로 전직원이 함께 꿈을 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이룰 수 있다.”고 밝히며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DVD를 상영한 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4대강 살리기와 미래국토 발전’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박 원장은 “4대강 살리기는 정부가 국가발

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라고 밝히며, 비전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는 “기후변화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 및 녹색성장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을 살려 물을 확보하게 되며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강중심 지역발전,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